

이슈브리프

No. 2025-39

‘적극적 행위자’로의 전환: 다카이치(高市)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와 한국에의 함의

최은미

연구위원

2025-12-23

야스쿠니 신사 참배 우려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으로 가려져 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은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1955년 자민당 창당 이래 처음으로 중·참의원에서 모두 단독 과반을 상실하고, 26년간 연립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이탈한 가운데 일본유신회의 느슨한 ‘각외협력(閣外協力)’에 의존하며 불안정하게 출발했음에도, 출범 직후부터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각 출범 불과 한 달여 만에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특히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정책 변화 속도가 두드러진다. 그렇다면 다카이치 내각하에서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정책 측면에서 핵심 변화는 ① GDP 대비 방위비 2% 목표의 2025 회계연도 조기 달성 추진, ② 2022년 개정된 ‘안보 3문서’의 2026년 말 재개정 착수, ③ 정보체계 통합을 겨냥한 ‘국가정보국’ 신설 및 스파이방지법 논의, ④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5유형’ 제한 철폐를 통한 방산·무기이전 규제 완화, ⑤ 경제안보추진법 개정 지시와 17개 전략 분야 집중 투자, ⑥ 대만 유사시를 ‘존립위기사태’로 연결 짓는 발언 공식화, ⑦ 헌법 9조 개정 및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 시사 등으로 요약된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변화가 억제력 강화와 안보 딜레마 심화라는 이중적 함의를 갖는다. 즉, 일본의 적극적 외교·안보 행보는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억제력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대만-동중국해-한반도 위기의 연동 가능성과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군사활동을 자극하며, 한국의 역할 및 비용 부담 압박 확대라는 위험도 함께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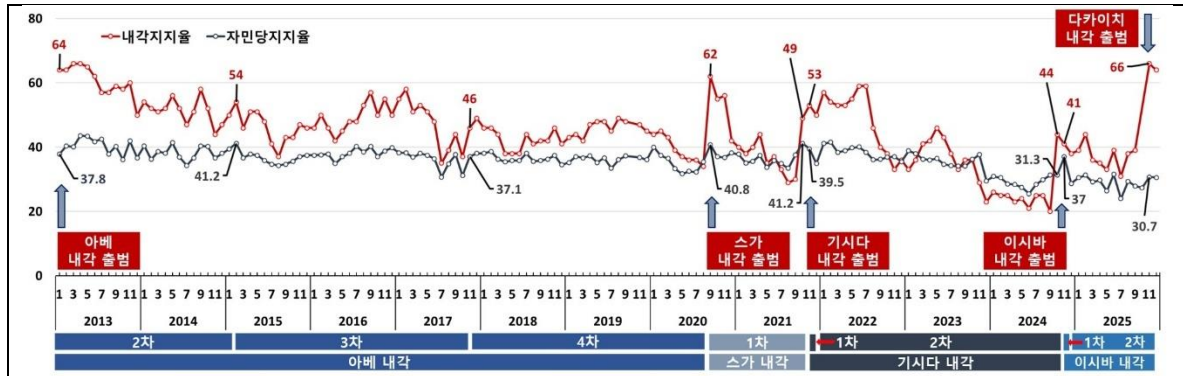
따라서 한국은 ① 일본의 역할 확대를 활용하되 자동연루를 피하기 위한 위기관리 원칙·절차를 선제적으로 정립하고, ② 중일 갈등이 한중일 협력의 경색으로 번지지 않도록 완충·조정자 역할을 강화하며, ③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사·영토 등 핵심 이슈에서 우리의 기존 원칙을 견지하되 안보·경제안보 협력은 제도화된 채널로 관리해 돌발 갈등이 전면 중단으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다카이치 내각의 출범: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외교·안보 행보의 가속

2025년 10월 21일 출범한 제104대 다카이치 내각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뒤를 잇는 명확한 강경 보수 내각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아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 ‘Japan in back’을 내세우며, 아베 전 총리의 뜻을 계승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내세웠지만, 출범 당시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1955년 자민당 창당 이래 처음으로 국회의 중의원 및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서 26년간의 연립정권을 꾸려온 공명당이 이탈하면서(10.10) 다카이치는 자민당 총재 자리에는 올랐으나(10.4), 총리로 선출될 수 있을지 불확실했기¹ 때문이다. 가까스로 일본유신회와 연정(10.20)을 통해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만(10.21), 일본유신회는 다카이치 내각 내에는 인사를 두지 않는 ‘각외협력(閣外協力)’² 형태의 지원을 선택했고, 결국 다카이치 내각은 약한 기반과 구조적 취약성을 노정시키며 출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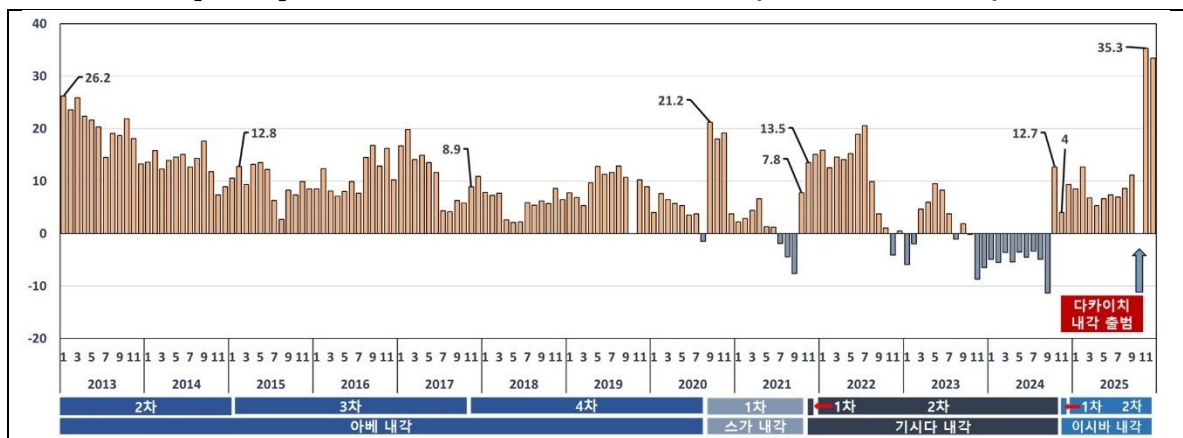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자민당과 내각 지지도는 급격히 상승했고,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 내각 출범 이후 실시된 JNN 조사(11.1-11.2 실시)에서는 내각 지지율은 82.0%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역대 2위이자, 2001년 고이즈미 내각 88% 다음으로 높게 나온 수치로,³ 아베 내각 출범 당시보다도 높다. NHK 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그림1] 참조).

[그림1] 내각 지지율 및 자민당 지지율(2013.01-2025.11)



출처: NHK 여론조사 참조하여 재구성. (작성: 함건희 선임연구원)

[그림2] 내각 지지율과 자민당 지지율 차이(2013.01-2025.11)



출처: NHK 여론조사 참조하여 재구성. (작성: 함건희 선임연구원)

특히,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에도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반면, 내각 지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그림2] 참조) 다카이치 총리 개인의 리더십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0·30대의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가 나타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⁴ 이러한 지지 추이는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문제 관련 발언을 계기로 중일 갈등이 격화된 이후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⁵ 이는 단순히 개별 정책에 대한 호응을 넘어,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결단과 전진'의 리더십이 장기 경제 침체와 정치 리더십 공백에 지친 일본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존 정치에 거리를 두었던 청년층을 상대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직설적인 소통으로 정치 참여를 이끌어 낸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이러한 국내 정치적 지지도의 상승은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안보 정책 재편으로 직결되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⁶ 자신의 내각을 '결단과 전진의 내각(決斷と前進の内閣)'으로 명명하고, 경제 재건과 외교 회복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안팎에서 일본이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며, 일본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세계 한가운데에서 꽃피는 일본 외교를 되찾겠다", "강한 일본 경제를 만들어 외교·안보에서 일본의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과거 아베 전 총리가 내세웠던 '아름다운 나라 일본' 노선을 계승하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과 다르없다.⁷

실제로 다카이치는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미일정상회담, APEC, G20 등 주요 외교 무대에 잇따라 등장하며, 외교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무색하게 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신뢰구축과 협력 강화를 부각했고,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하며 우호적 관계 형성에 공을 들였다. 또한, 대만 유사 사태 관련 발언이(11.7)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에 대해 강경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및 인적 교류 측면에서의 호혜성을 강조해 왔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대한 의욕을 표명했다. 이와 동시에 아베 내각에서 시작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구상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교 행보와 더불어, 정책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2.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의 일본외교: '적극적 행위자'로의 전환

(1) GDP 대비 방위비 2% 목표 2년 조기 달성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첫 소신표명 연설(10.24)에서⁸ "2027년 목표였던 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 확대를 2년 앞당겨, 2025회계연도(2025.4-2026.3)에 조기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2022년 기시다 내각이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통해 제시한 계획을⁹ 앞당긴 것으로 매우 급진적인 변화에 해당한다. 기시다 내각 당시 2023회계연도 6.8조 엔에서 시작하여 2024회계연도 7.9조 엔, 2025회계연도 8.7조 엔으로 매년 약 1조 엔씩 단계적인 증액을 실행하며 신중하게 접근했던 것과 달리,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한 달여 만에(11.28) 방위 관련 추가경정예산 1.1조 엔을 편성 및 확보하여 정규 예산 약 9.9조 엔에 더하여 총액 약 11조 엔으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2025회계연도 방위 관련 지출은 정부 추계 기준 GDP의

약 2% 수준에 사실상 도달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으며, 일본의 방위비 증액 속도는 애초 계획보다 크게 앞당겨진 셈이 되었다.¹⁰

(2)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다카이치 총리는 또한 이른바 '안보 3문서'를 2026년 말까지 재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¹¹ '안보 3문서'란, 2022년 기시다 내각에서 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가리킨다. 특히, 「국가안전보장전략」은 2013년 아베 내각에서 처음 수립된 이후, 9년 만인 2022년에 처음 개정되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다시 조기 개정을 지시함으로써 전략 문서의 개정 주기가 대폭 단축되는 셈이 되었다.

이에 따라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첫 회의(11.20)를 열어 2026년 4월까지 당내 의견을 정리하기로 하였으며, 정부는 2026년 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일정을 공식화했다.¹² 전 방위상이자 자민당의 안보조사회장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는 "2022년 이후 안보 환경이 크게 변했다"고 지적하며 조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¹³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유신회와 합의한 안보 공약과 그간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개정안에는 방위비 목표 상향의 명문화, 반격능력(기존 적기지공격능력) 강화를 위한 무기 체계 정비, 방위장비이전 규제 완화, 우주·사이버·전자전 등 새로운 작전 영역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이 핵심 방향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일본이 인식하는 안보 위협의 성격과 수준을 다시 규정하는 작업인 동시에, 향후 일본 안보정책의 중기·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과 수위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정보국 신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국내외 정보수집 및 분석 활동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国家情報局,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일본판 CIA) 창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총리 취임 직후 국가안전보장국(National Security Secretariat, NSS), 내각정보조사실(Cabinet Intelligence and Research Office) 등 기존 정보 체계 전반에 대한 재편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일본에는 관방부 산하 내각정보조사실, 법무성公安조사청, 경찰청 외사정보부, 외무성 국제정보총괄관, 방위성 정보본부 등 여러 정보기관이 분산되어 있고, 각각 조직 규모와 법적 권한이 제한된 조정 및 분석 기관의 성격이 강하고, 기능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일원적인 지휘 및 취합과 전략적 운용에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¹⁴

신설이 검토되는 국가정보국은 이러한 분절적인 구조를 통합해, 경찰청, 외무성, 방위성,公安조사청 등 각 부처와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취합하여 '정보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정보국장을 총리와 국방장관의 근접한 직위에 두어 내각정보조사실과 NSS를 아우르는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총리관저 주도의 정보활동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¹⁵ 한편, 이러한 국가정보국 신설 논의는 인적정보(HUMINT) 역량 강화, 스파이 방지법(대간첩법) 제정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안에 스파이방지법 제정 검토에 착수하겠다"고¹⁶ 공식화하였고, 이르면 내년 7월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¹⁷ 여기에는 ①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 체계 강화, ② 외국 정보기관·기업·개인에 의한 경제·기술·정치 스파이 활동 처벌 강화, ③ 국가정보국 신설과 연계된 정보보호, 보안 인프라 정비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13년 아베 내각 시기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特定秘密保護法)¹⁸ 이후 일본 정보·보안 법제의 다음 단계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표현·언론의 자유 침해와 일반 시민과 언론에 대한 과도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이전 원칙 제한 완화

2014년 아베 내각 당시 만들어진 일본의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¹⁹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운용지침을 통해 예외적으로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 바다에 설치된 기뢰 혹은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등 다섯 가지 유형(이하, '5유형')에 해당하는 장비 이전을 허용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자민당은 이러한 '5유형' 예외 규정이 오히려 운용상 제약으로 작용하여 방위장비품 수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이를 철폐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연립 합의에서 '방위생산·기술기반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2026년 통상국회에서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상의 '5유형' 제한을 철폐하고,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영공창(国営工廠: 군수품 제조공장) 및 관련 국유시설의 민간 조업 활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시하였다.²⁰ 두 당은 연립합의문을 통해 연내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2026년 4월까지 관련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자민당은 안전보장조사회를 중심으로 '5유형' 철폐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안보 3문서' 개정보다 앞서 운용지침 개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12.1).²¹ 이처럼 속도감 있는 접근은, 과거 자민당의 우경화에 대한 완충 장치

역할을 해온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한 정치 지형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명당과 결별한 이후 다카이치 내각이 새로이 연정을 구성한 일본유신회는 헌법 9조 개정과 자위대 명기, 방위비 증액 및 방위력 강화 등을 전면에 내건 정당으로 자민당의 방위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방위산업 육성, 방위장비이전 규제 완화 등 현행 정책 방향은 향후 한층 더 속도를 높이며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5) 경제안보 정책 강화와 17개 전략 분야 집중 투자

2025년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는 2022년 제정된 '경제안보추진법'의 개정을 지시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국제 정세가 전례 없는 속도와 복잡성으로 변화했고, 일본은 전후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대담한 '위기관리 투자'를 통해 강력한 경제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안보를 확실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²² 그리고 "AI·반도체, 조선, 양자, 합성 생물학·바이오, 항공·우주, 디지털·사이버시큐리티, 콘텐츠, 푸드테크, 자원·에너지안보·GX, 방재·국토 강인화(정비), 제약·첨단의료, 융합에너지, 중요광물·부소재, 항만 물류, 방위산업, 정보통신, 해양 등 17개 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할 핵심산업으로 지정했다."²³ 특히,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강화, 의료 인프라 및 기타 핵심 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방안 재검토, 외국 세력으로부터의 기밀 정보·데이터 보호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도록 했다.²⁴ 또한, 다카이치 내각은 11월 21일 경제 대책을 발표했는데,²⁵ 방위비 증액, 경제안보 투자, 에너지안보 강화를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은 안보·경제·산업 정책을 연계하는 '경제안보 국가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6)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 명시적 제시

11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무력공격이 발생한다면 존립위기사태(存立危機事態)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²⁶ 존립위기사태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맹국이나 지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비상 상황을 뜻하는 말로, 2015년 안보법제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이기도 하다. 역대 내각은 대만 유사 사태를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위기사태와 직접적으로 결부해 언급하기를 피해왔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 사태 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중국 측의 반발은 즉각적이고 거셌다. 췌젠(薛劍)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개인 SNS 계정에 “죽음의 길”, “들이민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글까지 올리면서²⁷ 외교적 파장은 증폭되었다. 이러한 외교적 마찰은 경제·문화 영역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고, 해제되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재개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중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긴 하였지만, 내용 면에서 보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이 일본의 존립위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 왔으나, 외교적 파장과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공식 석상에서 이를 명시하는 것은 피해 왔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이러한 기존 논리를 현직 총리가 국회에서 보다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낸 것에 의미가 있으며, 바로 그 점이 중국의 강한 반발과 국내 논란을 동시에 자극한 셈이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국내 지지율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일 갈등이 격화되던 시기인 지난 11월 30일 발표된 TV 도쿄와 일본경제신문 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내각 지지율은 75%로 직전 여론조사에 비해 1%p 상승했고,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사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해서도 “적절했다”는 응답이 55%,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0%로²⁸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동의하는 인식을 보이는 여론이 더 크게 나타났다. 즉, 현 단계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다카이치 총리의 공세적인 안보 태도를 지지하거나 용인하는 여론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7) 헌법 9조 개정과 비핵 3원칙 재검토 시사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부터 “비핵 3원칙(핵무기를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억제력을 얻는 것은 모순”이라며, 특히 ‘비반입’ 원칙의 재검토 필요성을 공언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1월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다시 드러났다. 비핵 3원칙을 향후 ‘안보 3문서’ 개정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제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만 답하며 명시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다.²⁹ 이 때문에 오랜 연립 파트너였던 공명당을 비롯해 사민당, 시민사회와 원폭 피해자 단체 등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³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비핵 3원칙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여전히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닛케이신문 여론조사³¹ 11.28-11.30, 유지 46%, 개정 39%).

한편, 헌법 9조에 대해서도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방향의 개정에 일관되게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총리 취임 후 중의원 본회의 답변에서는 “헌법 개정 원안을 국회에 제출할 권한은 내각에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아, 내각 주도의 개헌 가능성을 시사했다.³² 다만, 일본 내 높은 반핵 여론,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와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감안할 때, 단기간 내 헌법 9조 개헌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가 집권 여당과 연립 파트너의 정책 의제로 공론화되고, 일정 부분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 자체가 향후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이 보다 공세적 억제력 강화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한국에의 함의 및 정책적 고려사항

(1)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와 한국에의 함의

아베-이시바-다카이치로 이어지는 일본 외교·안보 정책은 정권의 변화 속에서도 큰 틀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움직이되, 속도감의 차이를 보여준다([별첨] 참조). 그리고 다카이치 내각의 급진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는 동아시아 안보 구도를 재편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하였듯, 다카이치 내각은 당초 2027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GDP 대비 방위비 2% 목표를 2025년 회계연도로 2년 앞당겨 조기 달성을 추진하고, 기시다 내각에서 개정된 ‘안보 3문서’를 2026년 말까지 재개정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유사시 중국의 군사적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서 이른바 ‘5유형(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제한을 사실상 철폐하는 방향으로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정보국(일본판 CIA) 설립을 축으로 정보 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비핵 3원칙, 그중에서도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과 여당 내 관련 논의는 일본이 향후 유지해 온 비핵·전수방위 노선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을 동북아에서 직접적인 억제력과 군사 역할을 행사하는 '적극적 행위자'로 전환시키며,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한국 안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대만해협-동중국해-한반도 위기가 하나로 연동되는 다중 전선(戰線)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높이고,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비 경쟁과 역내 군사활동 확대를 자극할 수 있는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위험도 내포한다. 또한, 한미일 3각 안보 구조 안에서 일본의 외교·안보적 위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미국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게 방위비 증액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³³ 이에 일본이 선제적으로 호응하는 흐름이 결합되면서, 한국 역시 중장기적으로 방위비 증액과 역할 분담 확대에 대한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다카이치 내각의 경제안보 강화와 정보의 '안보화' 또한 한국에게 기회와 도전을 함께 제기한다. 2022년 제정된 「경제안보추진법」을 토대로 17개 전략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국가정보국(일본판 CIA) 신설, 스파이방지법 추진을 결합해 나가려는 흐름은, 대북·대중 정보협력, 공급망 및 핵심기술 협력, 제3국 인프라·안보 협력 등에서 한일 공조의 공간을 넓히는 요소가 된다. 동시에 미중 경쟁과 대만·동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격화될수록 중국이 한미일 3각 협력에서 한국을 분리·압박하려는 유인을 키우고, 일본의 강화된 안보·정보·대외투자 규제가 재일 한국인과 한국 기업, 양국 시민사회 교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한국은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적극적 역할 확대'를 한미일 차원의 대북·대중 억제력 강화에 활용하는 동시에 대중 관계 및 역내 군사적 긴장과 규범 변화를 관리해야 하는 복합 위기'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제 안보, 경제, 정보, 정치 과정과 국내 여론을 하나의 패키지로 엮어 설계하는 정교한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

(2) 한국에의 함의 및 정책적 고려사항

이를 위해, 첫째,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한미일 차원의 억제력으로 활용하되 위기관리 논의가 필요하다. 다카이치 내각의 '일본의 적극적 행위자'로의 전환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군사·전략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방위비 GDP 대비 2% 조기 달성, '안보 3문서' 조기 개정, 대만 유사 사태의 '존립위기사태' 가능성 언급은 미국이 요구해온 동맹의 역할 확대에 일본이 먼저 화답한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이는 곧 한미일 차원의 대북·대중 억제력 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따른 파장은 대만

유사 사태로 인한 역내 안보 불안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최근 일본과 중국 간의 레이더 조사 갈등 문제는 양국 간 외교 갈등이 군사안보 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중일 간의 갈등이 대만-동중국해-한반도까지 연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 억지와 미사일 방어, 정보·감시·정찰, 사이버·우주 영역에서 일본의 억제력 강화가 가져올 실익을 활용하되, 한반도 밖의 분쟁에 자동 연루되지 않도록 한미일 협력의 범위와 수준, 참여 원칙을 선제적으로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미일 정상·외교·국방 채널에서 위기관리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대만·동중국해 사태가 한반도 사태와 연동되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지역 내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만 유사 사태가 현실화되고, 미국이 개입하게 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한미일 협력의 틀에서 무관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법 존중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되, 무력 충돌을 피하고 긴장을 낮추는 것이 모두의 이익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면서, 한국이 갈등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위기관리의 이해당사자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미국과 일본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중국과의 협력 채널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중일 갈등의 심화가 한중일 관계의 정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중일 협력의 유지 및 복원을 추구하는 조정자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 앞서 알아보았듯, 중일 갈등의 여파는 곧 한중일 관계에까지 이어졌다. 예정되었던 한중일 문화장관회담이 취소되었고, 한중일 정상회담은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및 중국 방문 소식이 전해진다. 이러한 계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한국은 한중 및 한일 양자 채널을 통해 중일 간 갈등이 한중일 전체 협력 구조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충자이자,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한중일 차원의 위기관리 및 소통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조율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중일 갈등 장기화가 경제, 문화, 산업, 인적 교류 등에 미칠 영향을 국내적으로 면밀히 평가하고, 위험 분산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한중일 협력 의제와 연계해 한국이 위험 관리와 협력 구조 설계를 동시에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일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TCS(한중일 협력사무국) 등 기존의 제도화된 협력의 틀을 적극 활용해 기후변화, 보건, 재난, 환경, 청년교류, 학술교류, 지방교류 등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셋째, 한일 관계 차원에서는 ‘미래 지향’과 ‘원칙 견지’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 나라이자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 “지금까지 정권 사이에서 구축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기초해 한일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등의 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일 관계도 순항 중이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하고, 정상 간 소통을 유지하며,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안보 협력, 경제협력 확대, 문화 교류 등을 지속해 나갈 것에 대해 뜻을 모았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강제징용 문제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 한일 공동개발구역(Joint Development Zone, JDZ) 협정,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 등은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다.

최근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서 중간 기착해 급유를 받기로 한 계획이, 일본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된 사건은³⁴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은 블랙이글스가 직전 독도 인근 상공에서 태극 문양을 그리는 훈련 비행을 실시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급유 지원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블랙이글스는 에어쇼 참가가 무산되었다. 이후 한국 정부는 10년 만에 재개하려 했던 군악대 교류도 중단했고, 8년 만에 재개를 준비하던 한일 해군 간 수색·구조 훈련(Search and Rescue Exercise, SAREX)도 보류하는 등 방위 교류에 제동이 걸렸다.³⁵ 정상 차원에서 ‘미래 지향’을 확인하더라도, 독도·역사 인식과 같이 민감한 사안이 개입되는 순간, 실무 협력과 신뢰 구축이 얼마나 쉽게 후퇴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한일 관계는 정상 간 정치적 의지와 전략적 필요에 힘입어 안보·경제 분야에서 협력의 저변을 넓혀가면서도, 역사·영토 문제와 국내 여론, 그리고 블랙이글스 급유 사건과 같은 돌발적 갈등 요인이 언제든지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이중적 구조 위에 서 있다. 따라서 한국은 과거사·영토·인권과 같은 핵심 가치·정체성 이슈에서는 원칙을

분명히 하되, 안보·경제안보·공급망 협력은 실용적으로 관리하는 접근을 제도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군사·외교 협력이 일괄 중단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일 간 고위급 전략대화와 실무채널을 촘촘히 운영하고, 국내 여론과의 충분한 소통도 필수적이다. 즉, '미래 지향'과 '원칙 견지'의 두 축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하느냐가 다카이치 내각 시기 한일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별첨】 일본 주요 외교·안보정책의 변화와 연속성(아베-다카이치)

구분	아베 내각	스가·기시다·이시바 내각	다카이치 내각
특징	(논의의 시작·기초 형성)	(심화·제도화)	(가속화)
방위비 증액 (GDP 2%)	· 2013년 NSS·방위계획의 대강을 통해 “적극적 평화주의” 명시를 통해 방위력 강화 설계 · 퇴임 후 당내에서 GDP 2% 논의 본격화 계기 제공	· (기시다) 2022년 ‘안보 3문서’에서 “2027년까지 방위·관련 지출을 GDP 약 2% 수준으로” 및 5년간 43조 엔 투입 방침 확정	· 취임 직후 2% 목표 달성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앞당기겠다고 선언 · 2025회계연도 정규 예산에 더해 추경예산 확보, GDP 대비 2% 구조 구축
‘안보 3문서’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 2013년 「국가안전보장전략」 제정 · 2014년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발표 · 우주·사이버·전자전 포함	· (기시다) 2022년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 · 반격능력, GDP 대비 2% 방위비 상향 등 명시	· 2026년 말까지 3문서 재개정 지시, 개정 주기 단축 · 자민당 안보조사사회에 2026년 4월까지 정리 지시
국가정보국 & 정보체계	· 2013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 ·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기밀보호 법제 정비 · 정보기관(CIRO,公安조사청, 방위성, 정보본부, 경찰, 외무성 등) 분산된 구조 유지	· 국방·외교 정보 중심에서 경제·기술 정보까지 포괄하는 논의로 진화. · (기시다) 2022년 NSS(국가안전보장전략)도 경제안보 추진을 위한 정부 체제 강화 및 공급망·기술 관련 조치 명시	· 취임 직후 정보조직 전반 재편 검토 착수 · 국가정보국(일본판 CIA) 이 각 부처의 정보를 취합·분석하는 ‘정보 사령탑’ 역할 수행 설계 · 스파이방지법 제정 논의 · HUMINT 강화와 결합한 정보국+보안법제 패키지 추진
방위산업 & 방위장비이전 3원칙	·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1967년 무기수출 3원칙 대체 · 조건부 방위장비이전 허용	· (기시다) 2023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개정, 미국에 패트리엇미사일 최초 수출, 무기수출 제한 완화	· 운용지침의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5유형 제한 철폐 추진 · 2026년 4월까지 개정 목표 자문기구·당내 논의 착수
경제안보·17개 전략 분야	· 공급망, 룰메이킹 등을 경제외교의 축으로 강화	· (기시다) 경제안보담당대신 신설 · (기시다) 2022년 「경제안보추진법」 제정, 중요물자·핵심 인프라·핵심기술·특허	· 취임 후 법률 개정 지시, 17개 전략 분야 지정 및 집중 지원 · 방위비, 에너지안보, GX 를 하나의 경제-산업-안보 패키지로 통합, 대중국 리스크 관리와 긴밀히 연동

		비공개를 4대 축으로 경제안보 법제화	
대만 유사 사태 & 집단적 자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집단적 자위권' 각의 결정 · 2015년 안보법제로 '존립위기사태' 개념 도입, 제한적 집단적 자위권 행사 근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가) 미일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문구 명시, 공개 담론 확대 계기 · (기시다) 2022년 NSS 에 대만해협 언급, 아베 등 보수 정치인의 "대만 유사=일본 유사" 발언으로 논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11월 7일 국회 답변 중, "대만 유사 사태가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고 답변 ·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 시나리오와 집단적 자위권 발동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언급한 첫 사례
헌법 9조 개정 & 비핵 3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 일부 허용, 9조 개정 없이 안보정책의 변화 단행 ·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를 골자로 하는 개헌 구상 제기 및 추진 · 비핵 3원칙 공식 유지, 퇴임 후 보수 내 '핵 공유·억지' 논의 촉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시다) 히로시마 출신으로 비핵·군축 전면에 내세우며, 비핵 3원칙 유지 · 현실적인 확장억지 의존 구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 취임 후 "헌법 개정 원안을 국회에 제출할 권한은 내각에도 있다"고 하여 내각 주도의 개헌 드라이브 가능성 시사 · 단기간 제도 변경 가능성은 낮으나, 논의 가속화 및 전후 핵·안보 레짐의 질적 변화 예고

저자

최은미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 외교부 연구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 일본정치외교, 한일관계, 동북아다자협력 등이다.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다.

- ¹ 다카이치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이후 도쿄도내 한 강연에서 자신을 “자민당 총재는 됐지만, 총리는 되지 못할지 모르는 여자라고 불리는 불쌍한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소개했다. - 毎日新聞. “高市氏、「総理になれないかもしれない女」と自虐 意欲も強調” (2025.10.14) <https://mainichi.jp/articles/20251014/k00/00m/010/230000c> (검색일: 2025.12.5)
- ² 일본유신회는 내각에 관료나 부대신, 정무관을 두지 않는 ‘각외협력(閣外協力)’을 선택했다. 연립정권의 일환으로 정책실현에는 관여를 하지만,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책임에는 한정적이다. - 東京新聞. “「閣外協力」はどういう関係？いままでと何が違う？ 自民と維新の新たな連立政権の枠組みを読み解く” (2025.10.21) <https://www.tokyo-np.co.jp/article/443815> (검색일: 2025.11.1)
- ³ TBS. ““歴代2位” 支持率82%の高市内閣に死角は？若者世代・無党派層の自民 “回帰” の兆しも・・・ 「有権者の期待」に答えられるか【JNN世論調査解説】” (2025.11.8) <https://newsdig.tbs.co.jp/articles/-/2275965?display=1> (검색일: 2025.11.10)
- ⁴ 産経新聞. “Z世代は高市首相「推し」 その本音は？ 「はっきり言う姿勢いい」「WLB捨てないで” 92025.10.27) <https://www.sankei.com/article/20251027-4AA2CS7OJZONBD6I5LM6QZ4PMY/> (검색일: 2025.11.10)
- ⁵ 毎日新聞. “高市内閣の支持率65% 日中関係悪化も高水準維持、若年層に強み” (2025.11.23) <https://mainichi.jp/articles/20251123/k00/00m/010/107000c> (검색일: 2025.11.25)
- ⁶ 首相官邸. “高市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 (2025.10.21) <https://www.kantei.go.jp/jp/104/statement/2025/1021kaiken.html> (검색일: 2025.10.21)
- ⁷ 産経新聞. “「世界の真ん中で咲き誇る日本外交」は安倍政権 木原官房長官が衆院内閣委で改めて説明” (2025.11.19) <https://www.sankei.com/article/20251119-EPDT3XJNDRH3VPTZBS4JK6OMPI/> (검색일: 2025.11.25)
- ⁸ 首相官邸. “第219回国会における高市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 (2025.10.24) <https://www.kantei.go.jp/jp/104/statement/2025/1024shoshinhyomei.html> (검색일: 2025.11.5)
- ⁹ 기시다 내각에서 제시한 2027년 회계연도까지(2027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약 2% 수준으로 확대하고, 2023-2027년 5년간 총 43조 엔을 방위력 정비에 투입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 ¹⁰ 朝日新聞. “今年度の防衛費、GDP比2%前倒し達成へ 補正予算案で積み増し” (2025.11.29) <https://www.asahi.com/articles/ASTCX4Q6QTCXUTFK00SM.html> (검색일: 2025.12.1)
- ¹¹ 首相官邸. “第219回国会における高市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 (2025.10.24) <https://www.kantei.go.jp/jp/104/statement/2025/1024shoshinhyomei.html> (검색일: 2025.11.5)
- ¹² 日本経済新聞. “自民党・小野寺氏「必要な防衛費積み上げ」 安保3文書の議論着手” (2025.11.2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00IT0Q5A121C2000000/>

(검색일: 2025.11.30)

¹³ 時事通信. "自民、安保3文書改定へ来春提言 防衛費増・装備移転緩和が焦点—非核三原則見直し議論" (2025.11.20) <https://www.jiji.com/jc/article?k=2025112000907&g=pol> (검색일: 2025.11.30)

¹⁴ The Chosun Daily. "Why Did Prime Minister Takaichi Order a 'Japanese CIA'?" (2025.11.19) <https://www.chosun.com/english/opinion-en/2025/11/19/JTLNWLTXL5BHFKXY4C6P2EZ4E/>

(검색일: 2025.12.5)

¹⁵ 読売新聞. "「国家情報局」創設、インテリジェンス強化へ...高市首相が官房長官に検討指示" (2025.10.24)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51023-OYT1T50193/> (검색일: 2025.11.30)

¹⁶ 読売新聞. "「スパイ防止法」に高市首相「年内に検討開始」と前向き、国民民主党と参政党が法案...課題は山積み" (2025.11.27)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51127-OYT1T50002/> (검색일: 2025.11.30)

¹⁷ 時事通信. "国家情報局、来年7月設置 インテリジェンス改革第1弾—政府調整" (2025.12.5) <https://www.jiji.com/jc/article?k=2025120500958&g=pol> (검색일: 2025.12.7)

¹⁸ E-GOV.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https://laws.e-gov.go.jp/law/425AC0000000108>

¹⁹ 박명희. "일본의 방위 장비 이전제도 개정, 한국 방위산업과 안보에 대한 영향은?" 이슈와 논점 제2198호. (2024.2.22). 국회입법조사처.

²⁰ 日本経済新聞. "自民党と日本維新の会、連立政権合意書の全文" (2025.10.2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0AP30Q5A021C2000000/> (검색일: 2025.11.20)

²¹ 朝日新聞. "自民、防衛装備品輸出の「5類型」撤廃を議論 安保3文書改定に先行" (2025.12.1)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TD13SV6TD1UTFK004M.html> (검색일: 2025.12.3)

²² 首相官邸. "経済安全保障推進会議" (2025.11.7) <https://www.kantei.go.jp/jp/104/actions/202511/07keizaianpo.html> (검색일: 2025.12.3)

²³ 内閣官房日本成長戦略本部事務局. "成長戦略の検討課題" (2025.11.4) https://www.cas.go.jp/jp/seisaku/nipponseichosenryaku/honbu/dai1/kentoujikou_set.pdf (검색일: 2025.12.3)

²⁴ 日本経済新聞. "高市早苗首相の18閣僚への指示書、全文明らかに" (2025.10.23)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30EU0T21C25A0000000/> (검색일: 2025.12.3)

²⁵ 首相官邸. "総合経済対策等についての会見" (2025.11.21) <https://www.kantei.go.jp/jp/104/statement/2025/1121kaiken.html> (검색일: 2025.12.3)

²⁶ 당시 발언은 수차례에 걸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태, 최악의 사태를 상정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사에는 여러 형태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대만을 완전히 중국 정부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가. 단순한 해상교통로 봉쇄일 수도 있고, 무력행사일 수도 있다. 가짜 정보, 사이버 프로파간다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발생한 사태의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실로 무력공격이 발생한다면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법률 조문대로다.” - 時事通信. “【詳報】台湾有事と存立危機事態を巡るやりとり(2025年11月7日)” <https://www.jiji.com/jc/v8?id=20251107yosan> (검색일: 2025.12.5)

²⁷ 연합뉴스. “오사카 中총영사, '대만 유사시=日위기' 인식 비난..."죽음의 길"" (2025.11.10)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0021900073> (검색일: 2025.12.3)

²⁸ 텔레東BIZ. “高市内閣支持75% 高水準を維持 テレ東・日経11月世論調査” (2025.11.30) <https://txbiz.tv-tokyo.co.jp/readings/2724> (검색일: 2025.12.3)

²⁹ 毎日新聞. “高市首相、「非核三原則」見直し議論へ 「持ち込ませず」が焦点” (2025.11.15) <https://mainichi.jp/articles/20251114/k00/00m/010/391000c> (검색일: 2025.12.3)

³⁰ 公明党. “党首討論 非核三原則、堅持せよ” (2025.11.27) <https://www.komei.or.jp/komeinews/p465453/>; 毎日新聞. “「非核三原則の見直し」に懸念示す ICANが日本に声明発表” (2025.11.20) <https://mainichi.jp/articles/20251120/k00/00m/040/183000c> (검색일: 2025.12.7)

³¹ 日本経済新聞. “台湾有事答弁「適切」55% 非核三原則、堅持46%・見直し39%” (2025.12.1)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80RI0Y5A121C2000000/> (검색일: 2025.12.7)

³² 毎日新聞. ““高市改憲”は内閣主導? 「原案の提出権ある」首相発言が波紋” (2025.11.11) <https://mainichi.jp/articles/20251110/k00/00m/010/017000c> (검색일: 2025.12.7)

³³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vember 2025) p.24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12/2025-National-Security-Strategy.pdf> (검색일: 2025.12.10)

³⁴ 연합뉴스. ““韓블랙이글스 日서 급유' 추진했다 무산...日, 독도비행 이력 항의”” (2025.11.2)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2013900073> (검색일: 2025.12.3)

³⁵ 뉴스핌. ““한국 해군, 일본 자위대와 이달 공동수색훈련 전격 보류”” (2025.11.1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1117000433> (검색일: 2025.12.10)